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기사**[2015. 11. 11.(수) 13:00부터 가능] **신문 기사**[2015. 11. 12.(목) 조간부터 가능]
	담 당 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044-287-6211, jchang@kli.re.kr) **최대우 KLI 기획조정팀 팀장** (044-287-6020, dwchoi@kli.re.kr)
	배포일시	2015. 11. 11.(수), 13:0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 배포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임금, 소득분배 그리고 성장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 -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하남은 개원 27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2일(목) ~13일(금) 서울 상공회의소와 프레스센터에서 '임금, 소득분배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컨퍼런스의 첫째날(12일)은 '최저임금과 노동시장불평등'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인 Alan Manning(영국 LSE) 교수가 "법정 최저임금의 이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 Gerhard Bosch(독일 뒤센베르크-에센대), Dale Belman(미국 미시건주립대), Joseph Sabia(미국 샌디에고주립대), 이정희, 오상봉, 안주엽(이상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특징을 소개한다.

□ Alan Manning 교수의 '법정최저임금의 이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내용에 따르면,

○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음**

- 이는 실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치적 압력 그리고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함

○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나 ,**

-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총수요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Joseph Sabia 교수의 '두 가지 빈곤정책 이야기: 최저임금과 EITC' 발제내용에 따르면,**

○ **최저임금이 빈곤층 감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학계가 대체로 동의**

-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이유는 시장 노동시간이 대체로 짧고, 가구 구성원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Sabia교수는 Manning 교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즉 최저임금은 십대 청소년의 고용율과 저학력층의 고용율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EITC(근로장려세제)는 양호한 빈곤감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EITC제도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최저임금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게 빈곤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며 취업인센티브도 확실하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최저임금과 EITC 두 제도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근로자들간의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컨퍼런스의 둘째날(13일)은 Michael Reich(미국 UC 버클리대) 교수가 최저임금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주상영**(건국대), **정준호**(강원대),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이 임금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박종규 박사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 발제를 통해,**

○ **최근 가계소득의 부진과 기업소득의 과도한 증가,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괴리 등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 근로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설계,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투자와 산업공유자산의 창출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함

□ **주상영 교수는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발제를 통해**

○ 현재 우리 경제는 자본심화, 인구증가세 둔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미 내수 성장과 수출 성장 모두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다고 평가

○ 현재 한국의 소득 분배, 부의 분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분배 구조로 볼 때,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고여 있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출을 유도하는 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 즉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데 공급측 요인만을 중시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총수요 유지·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주장

※ 개원 27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별첨

법정최저임금의 이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Alan Manning (London School of Economics)

□ OECD 국가들에서 법정 최저임금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음

○ 각 국의 실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치적 압력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함

○ 최저임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수용적인 태도로 변함 (2015 OECD 고용전망: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을 것")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불완전경쟁 노동시장을 전제하는 모델들의 핵심은 실업과 빈 일자리의 공존을 가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고용 수준이 수요와 공급 모두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함. 이 경우, 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분명해지며, 결국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실증의 문제가 됨.

○ 영국의 경우,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음에도 고용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규정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이 총수요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근로자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절감 기술발전에의 투자를 장려하여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나, 검증되지 않음

두 가지 빈곤정책 이야기: 최저임금과 EITC

Joseph Sabia (San Diago State University)

□ 최저임금이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학계가 대체로 동의

○ 다수의 빈곤층은 일을 하지 않거나 적은 시간만 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함. 빈곤층 근로자가 빈곤한 이유는 주로 적은 노동시간과 가구구성원이 많기 때문임

○ 최저임금은 십대 고용율과 저학력층 고용율 감소를 초래함

□ 이에 비해 EITC는 양호한 빈곤감소효과를 나타냄

○ EITC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최저임금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게 빈곤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임. 취업인센티브도 확실함

○ EITC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한데,

- 고용주의 임금 하향조정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음
- 자격요건의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의욕이 저하됨
- 미국의 경우, 한부모 가정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집중됨

□ 최저임금과 EITC 두 제도의 결합은 저임금근로자들간의 소득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미혼모와 무자녀 저숙련 근로자 간 대체

최저임금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사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 201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5,580원에 이며,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6,030원

○ 201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9달러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편. 중간임금 대비 44%, 평균임금 대비 35%

○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매우 높아서 2014년 기준 12.1%

○ 청년,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45%,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34%가 최저임금 미만

○ 가구내 지위가 가구주인 경우 최저임금의 105%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8.7%. 배우자는 15.2%, 그 외 가구원은 14.5% (한국노동패널자료, 2014년)

○ 최저임금영향권 근로자의 20%가 다음 년도에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가구의 시장소득 증가가 비최저임금가구의 소득증가보다 낮음. 한가지 이유는 최저임금 미준수

○ 최저임금가구는 비최저임금가구에 비해서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음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11~2014 한국노동패널자료, 이중차분법 적용)

○ 이것이 미준수율이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인지는 불분명

노사관계와 최저임금: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 사례

Gerhard Bosch (University of Duisburg-Essen)

□ **2015년 1월 <자유 단체교섭권 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써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저임금 도입, 기존의 "약한 자율"에서 "하이브리드(혼합)" 임금설정체계로 전환됨**

○ 과거 독일은 단체협약 적용범위와 영향력이 컸으나, 최근 민영화 및 아웃소싱 확산으로 고용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이 어려워짐(노조조직율 18%, 협약적용율 62%). 이에 따라 저임금부문이 확대

○ 산업간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차이가 큰 데서도 드러나듯, 독일 임금설정체계가 배타적인 성격으로 변모한 탓에 노조 내에서도 법정최저임금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하기까지 수년에 걸친 논쟁이 있었음

□ **신설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인상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정부에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의 3자대표 조직에서 각각 대표를 보냄. 두명의 전문가도 양쪽 대표조직에서 추천하지만, 이들은 의결권은 없음

○ 정부는 연방국세청을 통해 그 준수를 감독하기로 하고 2019년까지 1600명의 감독관을 채용할 계획

- 미준수가 적발되면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최대 5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공공조달계약에 참여가 제한됨

□ **동서독 및 성별 임금불균형 완화, 고용불안정 근로자, 저숙련, 청년, 여성, 외국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혜택이 예상됨**

○ 분석결과 시간당 8.5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3/4 이상이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판단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사관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 우리나라의 법정최저임금 결정기구는 3자위원회 방식인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7년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의 시기. 권위주의적인 노동통제방식이 여전히 작동하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경총을 파트너로 하는 사회적 대화 형식 유지(이중적 방식의 전략, 유범상 2003).

○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차례 최저임금 논의 가운데 노·사·공익 3자가 합의한 것은 불과 7번, 민주노총이 참여한 16차례 논의 가운데에서는 2차례만이 합의 도출

- 그 외는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을 두고 논의하다가 최종제시안을 던지면 공익위원들이 논의촉진구간을 만들어 노사에 다시 제시하고, 주로는 일부 위원만이 참여한 표결로 결정

○ 실제로는 노사 주체보다는 공익위원이라는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됨

- 누가 공익위원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 추천과 임명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초기 제시안의 격차가 심지어 80%p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높은 미준수율

○ 2006~2010년 5년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한 결과, 10곳 중 4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이 경제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Michael Reich (UC Berkeley)

□ LA 시의회는 2014년 $9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로 인상하기로함

□ 노동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2014년 대비 20.4%(17억달러), 30.2%(29억달러)의 추가 소득 (수혜자의 2014년 연간 중위소득 $16,000은 LA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50%)

○ 수혜노동자는 중위연령 33세의 교육수준이 낮은 성인이며, 80%가 유색인종, 1/3이 자녀를 두었으며, 저소득가정에 분포하면서 가구소득의 1/2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①영업비용 변화, ②인건비 증가분에의 대처, ③소비자구매력 증가의 영향에 따름

○ 수혜자는 요식업/의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소매업/ 임시직업 알선소와 관리 및 폐기물처리서비스의 네 가지 산업군에 절반가량이 밀집.

- 요식업종사자의 79.7%, 의류제조업 74.9%의 임금이 상승함. 금융보험 및 부동산, 정보 등 전형적 고임금산업에의 영향은 미미함

○ 최저임금 인상 비용의 일부는 이직율감소로 상쇄되므로, 인건비는 2017년에 2.1%, 2019년에 3.8% 상승하고,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영업비용의 증가는 각각 0.5%, 0.9%

□ 최저임금이 LA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비용은 인건비(영업비용) 증가분에 따른 물가상승과 소비지출 감소

○ 편익은 노동자들의 순소득 증가액

○ 순영향: 비용 및 편익과 지역 승수효과를 고려한 GDP와 고용의 순증감 누적분

- LA시, GDP는 -0.1%, 고용은 -0.1~-0.2%, LA 카운티, 2019년까지 고용이 0.1% 증가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선택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 **저임금고용은 2006년에 29%를 정점으로 이후 줄어들어서 2014년에는 24%**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이후 자료. 저임금의 정의는 중위임금의 50%미만)

□ **임금서열별 일자리의 고용 몫 증감**

○ 2007년 이후 고임금 일자리 증가폭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주로 증가함

- 제조업 고임금은 207천 명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고임금 184천 명 증가. 도매 및 소매업 고임금도 65천 명 증가.

- 직종분류체계의 변동을 감안하면 2007년 전후를 비교하면 제조업은 비슷한 수준의 고임금 일자리 증가폭을 유지한 셈이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고임금 일자리 증가세가 꺾이면서 2007-2014년 간 고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그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

- 저임금 일자리는 2007-2014년 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317천 명 증가했지만, 2007년 이전 저임금 일자리를 주도했던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대폭 감소한 것이 2007-2014년 간 저임금 일자리 증가폭을 감소시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 우리경제의 현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매우 부진

○ 외환위기 이전까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거의 같은 빠르기로 증가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이러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에는 기업소득은 무려 연평균 19.1%씩 늘어나는 동안 가계소득은 불과 연평균 1.6%의 증가에 그침

○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소득이 훨씬 부진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소비 및 내수부진과 저축률 하락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유발하게 함으로써 우리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의 함정을 구성

□ 2007년 이전까지는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이 일치하여 움직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임금없는 성장의 원인은 절반은 노동력인구의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근로자 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절로 늘어나던 임금수준이 2008년부터는 멈추었고, 2011년부터는 오히려 연령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평균급여를 낮추기 시작함

○ 따라서 임금 없는 성장은 3~5%의 경제성장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이므로,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됨

□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정상적인 경제로 탈바꿈 시켜야만 저성장에서 탈출 가능** (GDP 대비로 본 기업의 사내유보는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최고)

○ 금리인하나 재정확대로는 단기적인 회복은 가능할지라도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체계는 세제(稅制). 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이익을 분리하여 금융소득에는 높은 세율 적용 (현재는 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로서,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인 38%보다 현격하게 낮음)

○ 종업원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이익규모와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종업원 이익연동 성과급' 제안 (인건비의 상방경직성, 즉 현재 기업이 여력이 있어도 미래에 경영성과가 나빠질 경우를 우려하여 임금을 인상하지 못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대신 불황기간에도 고용안정성은 높아짐

- 근로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편향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현행 분배구조를 교정하는 한편, 기업의 과도한 저축 인센티브를 해소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주상영 (건국대학교)

□ (기능적) 분배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함

○ 실증분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기본적 이론 틀은 (포스트) 케인스주의에 입각하지만, 동시에 주류경제학이 중시하는 이론적 경로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일종의 '절충적 접근'을 시도

○ 기능적 분배 변수인 노동소득분배율이 총수요와 총공급(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포괄적으로 검토

□ 한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생산성 증가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를 공급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수요 측면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 주류경제학의 관점을 반영하여 수정된 칼도어-버둔 계수 추정

○ 자본축적과 캐치업 효과 등을 통제하더라도 총수요 하락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수요 감소가 그 자체로 생산성의 감소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분배의 악화가 총수요 부진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

○ 한국에서 기능적 분배의 변화는 주로 소비에 미치는 경로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투자 및 순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수요주도성장 전략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

○ 자본심화, 인구증가세 둔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내수 성장과 수출 성장 모두 한계에 도달해 가는 모습

○ 현재 한국의 소득 분배, 부의 분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분배 구조로 볼 때,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고여 있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출을 유도하는 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데 공급측 요인만을 중시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총수요 유지·확대 정책이 필요

○ 분배의 개선이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소비 및 내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물론 수요주도성장 전략은 임금주도성장 전략을 포함하되, 새로운 성장전략이 임금주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임

○ 분배친화적 사회투자, 경제 전체에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투자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총수요와 생산성 유지의 광범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임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정준호(강원대) · 전병유(한신대)

□ 한국경제의 '이중화' 특징

○ 탈산업화시대에 작동하는 구조적 경향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중화'가 적절함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별 및 차별적 대우, 기계에 의한 숙련의 대체, 모듈화와 아웃소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의 구조적 동인들이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하는 과정)

□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조립형 산업화로 보는 시각에서는 중간재 생산의 숙련축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설비투자에 주로 의존하는 특징에 주목함(핫또리 타미오, 2007)

○ 이러한 산업화를 지탱하는 기술적 기반은 NC기계→로봇기반의 공정 자동화→IT기반의 모듈화, 즉 일련의 자동화과정이므로,

- 중간숙련이 협소해지고 비정규직화가 진행됨. 막대한 설비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장시간노동이 고착화되고, 요소비용의 경쟁에 매우 민감하여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외주하청이 빈번히 활용됨.

- 그 결과 산업연관 효과의 약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숙련의 해체 등이 나타남

□ 대기업 주도의 수출경제에서 성장의 과실은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생산과 소득간의 괴리,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임금 없는 성장,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괴리, 자산효과의 불안정성 등의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이 나타남

□ **수출주도성장체제에서 탈피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의의가 인정되지만**

○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생산성을 동반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소득-자산-금융의 연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라는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이 요구됨

□ **새로운 성장전략의 요소로서, 산업공유자산의 형성,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소득정책, 국가 발전주의의 공적 성격의 강화와 공유자산의 발전주의적 활용 등을 제시하고자 함**

○ 혁신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군의 창출이 필요한데, 그간의 산업클러스터 창출시도가 실패한 교훈을 얻어 산업공유자산의 창출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의 독점에 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함. 또한 이것은 경쟁을 구획화하는 내부적인 거버넌스 시스템과 결합되어야함

○ 국가발전주의의 공적 성격 강화. 정부가 시장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일정 정도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이 가지고 있는 공유(국유)자산을 활용

-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 재산권의 경계를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